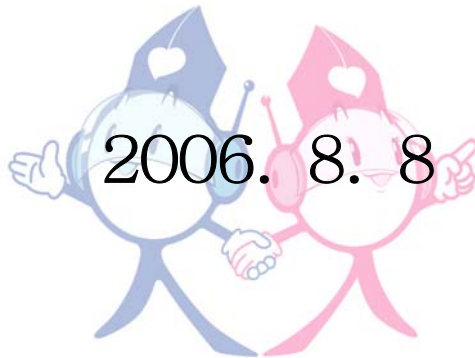


- 일시 : 2006. 8. 8(화) 15:00 ~ 16:00
- 장소 : 교육인적자원부 16층 대회의실

교육정책 현안 보고



교육인적자원부

MINISTRY OF EDUCATION & HUMAN RESOURCES DEVELOPMENT

차 례

I.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진단	1
II. 주요현안 추진상황	2
1.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	2
2.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	3
3. 방과후 학교 확산	4
4.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추진	5
5. BK21 사업 평가관리체계 및 연구윤리 확립	6
6.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	8
7. 사립학교법 시행 후속대책	9
8.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	10
9. 동북아역사재단 출범	11
10. 기타 현안	12
III. 주요입법 추진현황	13

I. 2006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진단

□ 공교육의 “신뢰회복”을 위하여,

- 내신을 강화하고 전형을 다양화하는 2008학년도 새 대입제도의 안착과 방과후 학교 활성화에 주력
- 동시에, 교육부문 양극화 해소대책('06.2)을 수립,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, 병원학교, 새터민학교 등 체감할 만한 추진동력 확보

□ 지속적인 대학 구조조정을 통해 산학협력 활성화와 대학특성화를 유도하여,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

- 「세계지원」 확대 등으로 대학 산학협력 실질화
※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·영구화('06. 1) 및 부가가치세·농특세 등 면제('06. 3)
- 의·치의학, 경영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인력 양성체제 구축

‘시스템’으로 정책을 관리하는 『교육정책 품질관리제도』 전면 도입

■ 정책품질관리 선도부처로서 90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책품질 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 (부산시청, 대전교육청 등 10개 기관 역벤치마킹)

- ※ 국무조정실 상반기 점검결과, ‘매우 우수’한 것으로 평가('06.7.25 국무회의 보고)

□ 그러나, 관리체계 및 제도개선 미흡으로 「학교급식 사고」 발생

- ※ 수도권 학교 위탁급식(CJ푸드) 33개교 2,829명 및 기타 위탁급식 15개교 663명 등 총 48개교 3,492명 식중독 환자 발생('06.6.16~7.4)

- 주요 법안의 입법지연으로 원활한 정책추진 차질 우려
※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,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, 지방교육자치 개선 등

Ⅱ. 주요 현안 추진상황

1 2008학년도 대입제도의 안정적 정착

- 교육의 중심축을 '학교 안'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입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 확대, 수능 및 대학별고사 영향력 완화
- 교육부-대학간 협의를 통해 대학별 세부시행계획을 조속 마련

□ 주요 내용

- 현 고2학생부터 학생부 표기 방식 개선, 비교과 영역의 충실한 기재 등을 통해 학생부 신뢰도 제고
 - ※ 표기방식 개선 : 평어, 석차 → 원점수, 과목평균 및 석차등급
- 2008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수능성적의 영역·과목별 등급 제공
- 2005년부터 논술심의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여 대학별고사 최소화 및 본고사 논란 방지 (54개교 중 14개 대학 개선요구)
 - ※ 주요 24개 대학 입학처장 공동발표('06. 5)
학생부 반영비중 50% 이상 확대, 대학별고사 최소화 및 본고사 논란 방지 등

□ 향후 계획

- 2008 대학별 세부 시행계획 마련을 위한 대학과의 협의 지속
- 2008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 확정·공고
 - 학생부 반영비율 제고, 수능 9등급화, 동일계 특별전형 도입 등
- 2007학년도 대학별고사 논술 심의 및 위반대학에 대한 행·재정 제재

2 교원평가제 확대 시행

- 교원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교원평가제 2005년 11월 시범 도입
- 금년 하반기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의견수렴을 거쳐 확대방안 마련

□ 주요 내용

- 교원의 자기개발 촉진을 위해 동료교원의 수업현장 참여관찰, 교장·교감에 대한 학교경영 평가, 학생·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통한 교원평가 도입

□ 추진 경과

- 전국 초·중·고 67개교 시범운영
- 시범운영과정에서 높은 국민적 요구와 지지를 얻음
 - ※ 교원평가제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83% 찬성 (리서치앤리서치, '05. 11)
 - ※ 48개 시범학교 교원·학부모·학생(1,500명) 대상 중간점검결과 ('06. 3)
⇒ 교원평가로 인한 수업개선 등 전문성 신장에 거는 기대에 대해 동료 교원 66.7%, 학부모 82.3%, 학생 73.1%가 긍정적 응답

□ 쟁점 사항

- 교원평가가 교원구조조정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이유로 전교조 반대

□ 향후 계획

- 시범운영 결과 분석·평가('06. 8 ~ 9월)
- 교원평가제 일반화 모델 및 확대시행 방안 마련('06. 9월 중)
 - 학교급/규모별로 현장적용에 적합한 모델 개발
- 전문가 언론기고 등을 통한 교원평가의 당위성 적극 홍보(연중)

3

방과후 학교 확산

- 교육격차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을 학교 안에서 해결
- 학교가 지역사회의 구심이 되어 지역공동체 복원에 기여

□ 주요 내용

- 다양한 교육수요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고,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교육·보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방과후 학교 본격 시행('06)

□ 추진 경과

- '06. 2월부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자율로 운영
 - ※ '06. 6. 30. 현재 98.9%(초 99.6%, 중 98.4%, 고 97.6%) 운영
-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운영 지원을 위해 19개 郡 지원
 - ※ 충남 서천, 전남 곡성, 경남 거창 등 규모 및 지역여건에 따라 2억~7억원 지원

□ 향후 계획

- 소외계층 학생(농산어촌, 저소득층)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
 - 농산어촌 지원 : 19개군('06) → 88개군('07) → 139개 전 시·군('08)
 - 저소득층 학생에게 바우처 지급, 인근학교까지 선택 수강
 - ※ '06년 시범운영 → '07년 기초생활수급자(30만명) → '08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
- 교사 업무부담 경감 및 실질적인 유인체계 마련
 - 방과후 학교 전담인력의 채용(평생교육사 및 사회복지사 등)
 - ※ '06년 2학기부터 소규모학교의 전담인력 인건비 보조
- “입시위주의 파행적”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여, '06년 2학기부터 현장 배포

4 양극화 극복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 추진

-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양극화 극복의 轉機 마련
- 체계적 교육안전망 구축으로 정책의 지속성, 체감도 제고

□ 주요 내용

- 양극화 극복의 결정적 단서가 되는 교육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할 수 있도록 통합적·체계적 교육안전망 구축

-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: 도농간, 도시지역내 교육격차 해소
 - 도시근교 우수고/농산어촌 1군 1우수고,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, 평생학습도시
- 소득계층간 교육격차 해소 : 저소득층 단계별·체계적 지원
 - 만5세아 무상교육, 방과후 학교 무료수강 지원,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등
- 공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지원 확대
 - 대안교육, 성인 문해교육, 병원학교, 국제결혼 가정 등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확대

□ 추진 경과

- 금년을 “교육격차 해소 원년”으로 삼아 교육안전망 구축
- 일부 성과 가시화, 양적·질적으로 체감도는 미흡

※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: '06년 15개 중소도시 선정(총 30개), 학생 95.5%, 학부모 97.4% 만족
평생학습도시 : '06년 24개 도시 신규 지정(총 57개), 24.2% 참여(전국 대비 2.6%p 높음)

- 정부 재정지원의 한계, 부처간, 교육청·학교와 지자체·지역사회 관련 기관의 유기적 연계 미흡

□ 쟁점 및 향후 계획

-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, 부처간, 중앙-지자체,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·물적 자원의 연계로 사업의 체계적·지속적 추진
- ⇒ 교육격차해소위원회 등 범정부 총괄·조정체제 구축('06. 8)
- ⇒ 방과후 학교, 대학생 멘토링 사업에 대학생, 학부모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자원 활용

5

BK21 사업 평가관리체계 및 연구윤리 확립

● BK21사업 평가·관리시스템 개선 및 홍보 강화

- 최근 BK21사업 평가관리와 관련, 지적된 문제점을 해소하고 부적절한 연구관행을 바로 잡는 계기 마련

□ 개선 방안

○ BK21사업 평가·관리체계의 전문화

- 학술진흥재단 내에 「BK21사업관리위원회」 설치 (8. 1)
 - ※ 평가·검증과정 개선, 개인별 연구실적 DB 관리, 사업비 집행의 투명화, 계량적 평가 방법의 개선 등
- BK21 사업단 현황 및 성과 등 모든 정보를 DB화한 「종합정보 시스템」 구축 (8월~)

○ 사업성과 등에 대해 체계적 홍보

- BK21사업은 교수연구비 지원 사업이 아닌 대학원생 연구 장학금 지원 인력양성(HRD) 사업
 - ※ 국정브리핑 기획 연재 (BK21 기대효과·필요성, 1단계 사업성과 및 2단계 개선점 등)

○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정착의 계기 마련

- 논문표절, 이중게재, 실적 무임승차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 대책 마련 ⇨ 학계의 자율적 정화와 제도적 보완 병행

□ 향후 계획

- 연구윤리에 관한 기준 제정 및 전담조직 신설 (8월말~)
- RAND연구소(미) 등과 협력, 국제수준의 '상시' 평가관리체계 구축

【붙임】

BK21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

구분	1단계 평가 결과 (제기된 문제점)	2단계 개선방향
사업 목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인력양성 성격 약화▪ 학문분야별 목표 차별화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HRD 사업으로서의 사업 성격 명확화 (R&D 연계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성과목표별 질적 수준 평가▪ 학문분야별 목표 차별화
지원 분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기초 및 학제간 (융합)분야 소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기초 과학 분야 확대 및 학제간(융합) 분야 신설
산학 협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산학협력 체제 구축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산학협력 체제 구축 노력 평가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취업, 기술이전 등 산학협력 관련 평가지표 강화
지역 균형 발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과도한 수도권 집중으로 수도권/지방의 연구력 격차 심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사업 신설 → 지방대 특성화 및 지역 혁신 촉진
평가 관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경쟁 시스템 부재▪ 평가·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관리 미흡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전문성 있는 상시평가체제 구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업별 성과 목표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충원 등▪ 탈락/진입 시스템 구축▪ 종합정보시스템 체계화 및 운영 규정 법제화 등 추진

6 구조개혁을 통한 대학 특성화

- '대학특성화 지표' 개발·적용으로 범정부차원의 대학특성화 추진
- 특성화 분야로의 자원 집중을 통한 대학교육의 경쟁력 제고

□ 주요 내용

- 대학 특성화를 위해 정부의 각종 자원 연계 강화
 - 범정부 차원의 '대학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' 구성·운영
- '고등교육평가원', '대학정보공시제' 도입 등 시장기제에 의한 구조개혁 추진
- 국립대학 선택적 특수법인화 도입

□ 향후 계획

- 인적자원개발회의를 통해 '대학특성화 지표' 확정('06. 12)
 - '07년부터 정부부처의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반영
- '권역별 대학 역량지표' 개발, 전북 및 제주지역 시범운영('06.9~)
 - ※ 권역(지역)내 대학의 교육력, 연구력, 산학협력 등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
- 실질적 산학협력 활성화로 산·학간 간극 해소
 - 「일터」 중심의 사내대학 활성화, 지역밀착형 산학협력 정착 추진
 - ※ 서울시 사례('서울시 산학협력포럼' 운영, 연간 1천억원을 대학에 투자) 전국 확산
- RHRD 사업 확대로 대학과 지역간 연계 강화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
 - 지역의 인구추계, 산업전략, 발전전략, 인력수급전망 등을 고려한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
 - ※ 양잠단지 전문회(충남), 발효식품 전문인력 양성(전북) 등 지역별 특수분야 인력 양성 확대

7

사립학교법 시행 후속대책

- 시행령 개정 등 하위법령 정비 및 사학 관계자 연수·지도 등을 통해 개정 사학법의 안정적 시행 유도

□ 추진 현황

-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계자 연수('06.6.28)
 - 대학평의원회 구성 등 법인 정관 정비 촉구('06.8.4)
 - ※ 정관변경인가 완료법인은 1개(건국대)에 지나지 않으나, 다수의 법인이 정관변경안을 마련하여 내부 논의 및 이사회 심의 준비중
- 임시이사 선임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 ('06.7.21)
- 학교법인 운영 지도
 - ※ 192개 대학법인 중 92개 법인이 임원의 인적사항 공개('06.8 현재)

□ 쟁점 사항

- 한기총 및 일부 사학법인 등의 사학법 반대 움직임 상존
 - 대학평의원회 구성, 정관변경 및 개방이사 선임 등 후속조치 지연
- 헌법소원 제기로 법 시행의 어려움
 - 개방이사 규정은 합헌 예상, 학교장 임기제한 규정 등은 위헌 논란
- 법 재개정 논의
 - '개방이사'가 핵심쟁점이나, 여·야간 합의 도출에 어려움 예상

□ 향후 대책

- 사학법 후속조치 종합 실태조사 및 집중 컨설팅 실시('06. 8월이후)
- 헌법재판소 및 국회의 재개정 논의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 모니터링 및 당정간 공조체제 유지

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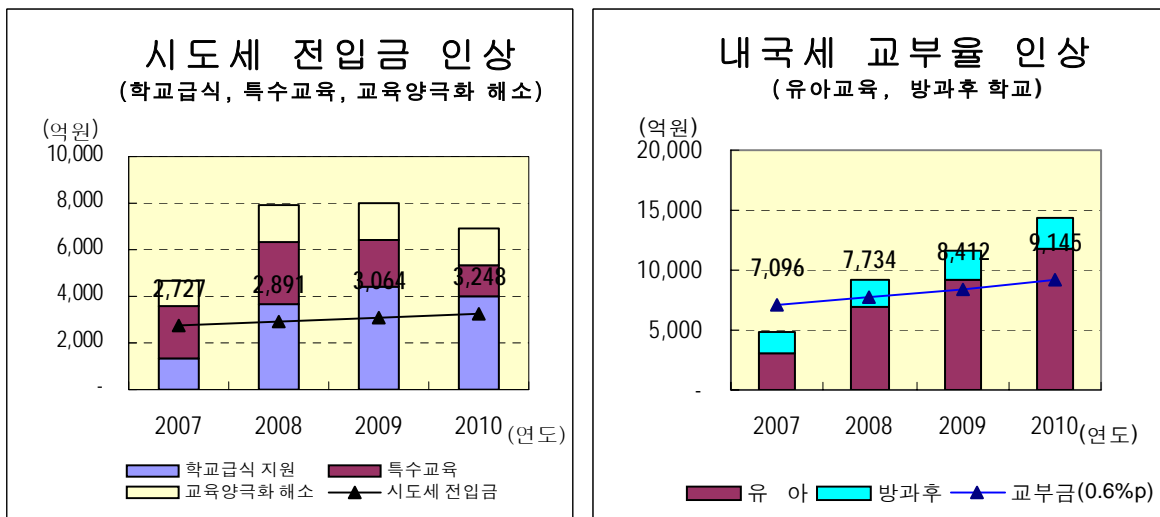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추진

- 학교급식, 유아교육, 방과후 학교 등 주요사업 재원의 안정적 확충을 위해 시·도세 전입금 및 내국세 교부율 인상 등 추진
 - ※ 국무위원 자원배분토론('06. 4.22~23)
 - ※ BH 사회정책수석실 주재 지자체 부담 확대회의('06. 7.27)

쟁점사항

- 시·도세 전입금 인상 관련
 - 서울시, 인천시, 경기도는 시·도세의 2% 이상을 직접 교육사업에 투자하거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
- 내국세 교부율 인상 관련
 - 교부금 인상률 및 시기는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과 연계 검토

[시도세(서울,인천,경기) 전입금 2% 및 교부율 0.6% 인상시 추계]



향후 계획

-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: '06. 8월
- 법제처 심사, 국무회의 의결, 정기국회 제출 : '06. 9월

9

동북아역사재단 출범

- 중국의 '동북공정',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및 독도 영유권 침해 시도 등에 대응할 상설전담기관 설립·운영

□ 주요 내용

- 동북아 역사 및 독도문제 등에 대한 장기적·종합적인 연구·분석과 체계적 정책개발을 위해 동북아역사재단 설립

□ 추진 경과

- 재단 설립을 위한 법률('06.5.19) 및 시행령 제정('06.8.8 국무회의 심의)
 - 재단 설립지원을 위한 T/F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·운영(6~8월)
 - ※ 외교부, 해수부 등 5개 부처 합동 참여

□ 향후 계획

- 동북아역사재단 출범(8.20 법률시행 직후)
 - '고구려연구재단' 해산 및 흡수·통합(9.1)
- 사안별 전략 및 정책대안 마련
- 학계·시민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, 전방위 대응

역사왜곡 및 독도관련 대책

- ◆ 일본 고교 검정 역사교과서 분석 및 독도관련 교육·홍보자료 개발·보급('06.10)
- ◆ 역사 교육과정 개정(역사 과목 독립) 추진('05.3~'07.2)
- ◆ 역사교육 강화 종합방안 수립·추진('06.10)
- ◆ 중국 역사 교과서 개정 동향 지속적인 파악('06~)
- ◆ 외국 교과서 한국관련 오류시정 및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추진('06~)

10 기타 현안

● 인적자원혁신본부 출범

- 인적자원개발기본법 개정을 통해 **HRD 총괄부처**로서 위상 확보
- 세계 유수의 CEO·국제기구·정부대표가 참석하는 「글로벌 인적자원 포럼」(Global HR Forum) 창설('06.11.8~10)

● 영어교육 혁신방안

- 전 국민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사 역량 강화 및 학교 영어교육 혁신

● 학교급식 대책

- 학교급식법 개정 공포(7.19)에 따른 직영 전환, 안전한 식재료 공급 방안 등 후속대책 수립

● 교원승진 임용제도 혁신

- 교육혁신위와 연계하여 능력중심 교원인사제도 마련 중(8월 보고예정)

● 교원 성과급 확대

- 성과급제도의 취지에 맞게 차등지급률 점진적 확대

● 개방형 자율학교 시범운영

- 혁신의지가 강한 운영주체에게 학교 운영권을 위탁하는 새로운 학교모델 도입 ('07. 3월 시범운영)

● 법학전문대학원 도입

- '09. 3월 개원을 목표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을 위한 입법 추진

● 울산 국립대 설립

- '09. 3월 개교를 목표로 공업계열에 특성화된 4년제 국립대학 설립 추진

● 국립 한의학과 설치

- 의과대학이 있는 1개 국립대학에 한의학과 설치 추진

● 한·미 FTA교육서비스 협상 능동적 대처

- 한·미 FTA교육서비스 협상을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계기로 활용

Ⅲ. 주요입법 추진현황

□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제출(14건), 의원발의(139건) 및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률 등, 주요법안의 입법이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되도록 최대한 노력

□ 주요법안 내용

연번	법안명	주요골자	비고	
			제출	심사현황
1	법학전문대학원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(제) [정부안]	○ 3년제 석사과정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	'05.10.27	교육위 법안소위 계류
2	인적자원개발기본법(개) [정부안]	○ 인적자원혁신본부 설치	'05.6.08	교육위 법안소위 계류
3	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(제) [정부안]	○ 한국고등교육평가원 설립	'05.10.05	교육위 법안소위 계류
4	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(개) [백원우의원안 등]	○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 통합 ○ 교육감·교육위원 주민직선제	'05.04.19	교육위 법안소위 계류
5	자격기본법(개) [정부안]	○ 직업교육훈련의 현장성 제고를 위한 국가직무능력표준제도 도입	'04.08.30	교육위 법안소위 계류
6	고등교육법(개) [정봉주의원안]	○ 교원확보율, 취업률 등 대학 정보공시제 도입	'05.11.11	교육위 회부 (미상정)
7	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(제) [정부안]	○ 방과후 교육 등 학·내외 교육 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 보상	'05.12.23	교육위 회부 (미상정)
8	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(개) [교육위 대안]	○ 학원의 과도한 심야 교습시간 제한	'05.02.16	법사위 계류
9	초·중등교육법(개) [교육위 대안]	○ 방과 후 교실 개설·운영	'05.09.08	법사위 계류
10	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(개) [정부안]	○ 방과 후 학교지원 등 지방이양을 위한 교부율 인상 (19.4%→20%)	'06. 9월중, 국회 제출예정	
11	특수교육진흥법(개) [정부안]	○ 장애영아 무상교육 및 유치원·고등학교과정 의무교육 도입	'06. 11월중, 국회 제출예정	
12	국립대학운영체제에 관한 특별법(제) [정부안]	○ 국립대학 특수법인화	'06. 11월중, 국회 제출예정	

차관 중심으로 계획된 교육현안을 차질없이 추진

체계적인 정책품질관리

- 비상근무 체제 유지 (8. 2 이후)
- 2008 대입전형 발표 등 8월중 주요현안 정상 추진
- 청와대·총리실·당과도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